

보전소송절차 안내

1. 보전처분(가압류·가처분) 신청사건의 진행 절차

보전처분이란 『민사집행법』제 4 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. 이 두 가지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.

- (1) 보전처분 가운데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(예컨대 처분금지 가처분,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)의 경우에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는데(『민사집행법』제 280 조 제 1 항, 제 3 이조), 변론 또는 심문을 경유할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.
- (2)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 때문에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보전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통상적 입니다.
- (3) 채무자는 위와 같은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.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

- (1)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,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(2)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다음과 같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 - 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10,000 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(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 만원으로 함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 때 그 금액이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, 1 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,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(금융결제원)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cardrotax.or.kr)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(인지금액의 1.2%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)
 - 채무자 1 인당 8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(3) 『이의신청서』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들어 오시면 내려받기(download)할 수 있습니다.

3.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

- (1)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다음과 같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켜 줄 것을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(민사집행법 제 287 조, 제 301 조)

-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(민사집행법 제 288 조 제 1 항 제 1 호, 제 301 조)
 -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(가압류에만 해당, 민사집행법 제 288 조 제 1 항 제 2 호)
 -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(민사집행법 제 288 조 제 1 항 제 3 호, 제 3 이조)
 -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(민사집행법 제 307 조)
- (2) 취소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다음과 같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10, 000 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(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 만원으로 함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 때 그 금액이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, 1 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,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(금융결제원)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cardrotax.or.kr)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 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(인지금액의 1.2%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)
 - 채무자 1 인당 8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(3)『취소신청서』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(download)할 수 있습니다.

4. 그 밖의 유의사항

- (1) 주장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신청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 번호, 팩스번호, e-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,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(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).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(2) 신청서나 주장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(예: 상대방이 2 명이면 원본 1 통, 부분 2 통),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 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(예: 상대방이 2 통이면 사본 3 통).
- (3)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신청 목적의 금액이 8 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,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, ② 당사자와 고용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된 『소송대리 위임장』과 500 원의 인지가 첨부된 『소송대리허가 신청서』를 제출하여야 하며,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『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』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들어오시면 내려 받기 (download)할 수 있습니다.
- (4)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,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

<한국어>

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『기일 변경 신청서』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(5)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법관 앞에서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.